

# 광주시, 명품포럼 만들기 '뒷말'

광주시가 지역을 대표할 '명품 포럼 만들기'에 나섰다. 협세 지원 방식과 형평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해 최신 트렌드와 미래 유망 산업 등에 대한 길라잡이 역할을 하게 될 명품 강연을 상설화하기로 하고, 내년에 광주상공회의소 주관 '광주경제포럼'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강사료와 인쇄비, 식비, 현수막 제작비 등에 쓰일 계획이다.

광주경제포럼에는 최근 몇년 간 협세 2700만원이 지원됐으나, 내년에는 갑자기 지원금이 5배 이상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친환경차, 4차 산업혁명, 문화컨텐츠 등 미래

## 협세 지원 방식·형평성 문제 논란 제기 주최 측 자부담 제각각...특정 단체 편중

먹거리를 주제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유명 강사를 초대하고, 강연 내용을 산업현장에 접목시키기 위해 지원금을 대폭 늘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도시에 비해 광주는 대표 포럼, 명품 강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기업인들의 하소연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이 포럼은 1997년 7월부터 시작해 1년에 10번 꼴로 그동안 모두 205차례 열렸다.

그러나 "사회지도층 격인 주요 경제인 단체에 협세를 지원하는 게 타당하느냐"는 가치판단의 문제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매주 주최하는 '금요초점포럼'의 경우, 1990년 6월 첫 강연을 시작으로, 지난 8일 '창조적 리더십과 보물관리, 공정한 나눔의 실천'을 주제로 한 한양대 전상길 교수의 강연까지 모두 1309차례 개최되는 등 전통과 깊이를 인정받고 있으나, 내년도 지원액은 올해보다 3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으로 책정됐다.

2004년 11월부터 117차례 열린 '여성경제인포럼'(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주최)도 올해보다

300만원 늘어난 30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주최 측의 자부담도 제각각이다. 광주경총은 연간 1억6000만원을 부담한 반면 광주상의회와 여성경제인 협회는 각각 6000만원과 1000만원을 자체 충당했다. 대신, 상의 측은 글로벌 인사를 초청하거나 대규모 포럼 등을 진행할 경우 최대 수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억원대 초청 강연이나 4차 산업혁명 관련 대형 포럼 등은 경제단체들이 공동 주관하거나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방안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며 "특정 경제단체 편중 지원은 불필요한 오해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은홍 기자

## 광주건설사 대표 골프장 여직원 폭행·막말

광주 한 건설사 대표가 골프장에서 여직원을 폭행하고 막말을 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께 나주 모 골프장에서 광주 지역 한 중견건설사 대표 A씨가 골프 모인 중 여직원 B씨의 왼쪽 턱 밑을 손으로 때렸다.

B씨는 경찰에 "A대표가 네가 술집 여자냐. 쥐를 잡아 먹었냐. 천한 것들이 주둥이(입술)에 빨간 루주(립스틱)를 쳐 바르고 다니냐고 막말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대표는 2~3차례 더 때리려 했고 이를 피하자 '루주나 바르는 천박한 것들이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 액세서리가 무슨 소용이냐고 막말을 계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격을 받은 B씨는 다른 직원들의 도움으로 A대표를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경찰이 조사에 나서자 B씨를 찾아온 A대표 측은 "자네가 잘생겨 손으로 (얼굴을)스쳤지 때린 게 아니다. 잘생겨서 루주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명하며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 가족 측은 "A대표가 지난해 내 속이 불편하다 음식에 인공조미료(MSG)를 넣었냐며 며칠을 잠기도 했다. 우리는 (돈이 아닌)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반면 A대표 회사 측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알 수 있다. 폭행도 아니고 장난친거다. 입술이 빨갛다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막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A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지팡이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70대 검거

광주 광산경찰서는 10일 둔기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74·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 전후(추정)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에서 지팡이로 남편 B(79)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툼은 과정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다리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B씨가 병동고에서 음료를 꺼내다 깨뜨리자 다투며, B씨가 쓰러진 지팡이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평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폭행·폭언을 일삼으며 괴롭혀 왔다. 양심을 품고 있던 중 시비가 붙자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쓰러진 B씨를 방치한 채 양로원에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9일 오후 7시께 귀가한 뒤 숨진 B씨를 보고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연락,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숨진 B씨가 의상이 심한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추궁,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형택 기자

## 병원에 인화물질 뿌려 불 지르려던 40대 검거

병원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병원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A(4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25분께부터 8시50분까지 광주 북구의 한 병원 5층에서 자신의 몸과 간호사실 주변 바닥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리미터로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병원 측의 퇴원 권유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무투 통증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A씨는 이날 오후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퇴원을 권유한 의료진에게 '입원 치료를 더 받고 싶다'고 불만을 표했다. 우울증이 심해 감정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전 주유소에서 인화물질 20l를 구입한 뒤 병원을 방문했으며, 만취 상태로 '병원에서 죽겠다. 환자들을 내보내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설득 과정에 담배에 불을 붙이려던 A씨를 붙잡았다.

## “교육부 사학혁신위 초·중등 관심 부족”

###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사노동조합은 10일 "최근 출범한 교육부의 사학혁신위원회가 대학 중심으로 구성돼 사립 초·중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교육부의 초·중등 담당 부서의 진교조를 합류시켜 명실상부한 사학혁신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광주교사노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도 사학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며 "교육부가 대학을 중심으로 사학을 혁신한다면 시·도교육청은 초·중등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교사노조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조선대에 파견할 임시이사 6명을 선임하면서 광주시교육청과 협조하지 않았다"며 "조선대 법인은 대학 외에도 4개의 중등학교가 소속돼 있는 만큼 남은 3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는 광주시교육청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중장정처럼 구겨진 타워크레인.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물류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작업중이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 용인 해당 사고현장에서 과학자들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도 없지만 증거실...중징계 요구”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감사결과, 유골 발견사실을 뒤늦게 보고한 세월호 후속대책추진단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 대해 은폐 의혹은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다만 이들이 보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보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7일 목포 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해(2.5cm 크기, 손톱뼈 1점)가 발견된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한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유해 발견 사실을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고, 장차 관 보고를 지연한 점, 장관의 지시 사항도 신속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중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해수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5급 이상 징계사항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다.

관련 실무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가 징계에 이를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 '경고' 등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다만 관계자들이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18~20일 장례식을 마치고 부단장이 현장에 복귀한 21일 선체조사위원회 및 일부 기준수습자 가족들에게 유해발견 사실을 통보하고, 해경 신원확인팀과도 협의해 22일 오전 10시께 검사 및 법의관 입회하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검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앞으로 업무처리 부적절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시암로 340번길 5

Drawing 이호동